

2015-1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전공연계 심화특강

일제강점기 지역 촌락공동체의
근대적 재편 구조

2015년 8월 26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204호

전주대학교 K-History 특성화사업단 · 한국고전학연구소

2015-1 전공연계 심화특강

일제강점기 지역 촌락공동체의
근대적 재편구조

목 차

1. 동아시아 촌락공동체론—한국의 사례 ----- 4p

2. 植民地朝鮮における 「開發」 を論ずる分析枠組みについて
— 식민지 조선의 개발을 둘러싼 분석 체계에 대해서----- 12P

동아시아 촌락 공동체론 - 한국의 사례

정승진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 촌락공동체론: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鄭勝振 (成均館大)

제1장 21세기 지역사회 공동체론의 현재성

- 동아시아 촌락공동체론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제2장 근대전환기 동아시아에 있어서 농촌 지역사회의 변동

1. 촌락공동체론의 계보학
 - 히라노-가이노우論爭(1950s), Scott-Popkin論爭(1970s)과 그 이후
2. 동아시아 촌락공동체의 제유형
 - 한국을 중심으로 中國, 日本, Vietnam, Java 등

제3장 근대전환기 한국의 열린 촌락, 닫힌 공동체의 이미지

1. 전통사회 내 사회적 관계의 장기지속과 변화
 - 전라도 靈光, 羅州 등지의 사례
2. 근대전환기 식민지화의 충격과 주변 농촌사회의 재편
 - 전북 益山 일대(湖南平野)의 사례

제4장 식민지기 한국 촌락의 중층성과 일본모델

1. 규율권력 및 시장경제의 관통
 - 사회적 동원화(농촌조직화), 상품화폐경제화 등
2. 식민지 지역사회의 적응(반응) 양태
 - 창조된 전통(invented tradition), 소전통(little tradition) 개념을 중심으로

제5장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미래상

- 농민문화(정체성, 전통성)와 Utopia, Vision
- 지역사회, 글로벌리즘, 복지사회(사민주의) 등

개요

이 노트는 20세기에 들어선 한국사회가 대외적으로 개방된, 이른바 ‘열린 촌락’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힌 공동체’의 이미지를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비교사적(실증적), 이론적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근대전환기 한국의 촌락 농민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local society)의 장기존속과 그 변동양상을 몇 개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위에, 日本, 中國, Vietnam, Java 등 동아시아 농촌사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동체의 일반이론과 유형화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사회 관점에서 농민의 행위 패턴과 촌락의 존재형태를 둘러싸고 한국의 전통성, 정체성(identity)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근대전환기 농촌 사회관계의 변동양상 - 영광 독배기(立石) 마을의 사례 -

문제의식: ① 지주-소작간 계급갈등[地主制] 문제에서 호혜·온정주의[均作制] 원리를 포괄하는 시각의 확대 문제, ② 동아시아 인구밀집지대(=수도작지대)에서 근대전환기 농민(小農)의 존재 형태(=사회적 관계, 결속)에 대한 근본적 질문..., 학제간 융복합 연구의 고전적 과제.

배경: 독배기(立石)라는 영광의 한 集姓村, 30戶 전후(30% 強이 동족), 25% 強의 移居비율. 양반(증가형) 재촌중소지주가의 고문서 (靈光 영월 辛氏家 古文書) 및 지역 자료.

영광의 鄉約案 : 구래의 동계(香徒) 전제, 남전 여씨향약(주자학, 儒學)의 도입·착근.

- ① 16세기 말 영광 영월 신씨가 신유일(1569~1632)에 의해 작성.
- ② 1797년 신수목(1768~1822)에 의해 重修, 군 단위의 首領鄉約.
- ③ 18세기 말까지 영광 신씨가에서 鄉論 주도, 이후 주도권 상실.

전경목의 山訟 분석: 18세기 이래 郡단위 鄉約의 해체과정이 배경, 門中契도 혼미 거듭.

- ① '宗中山'의 소유 및 용익권 갈등: 직계 (종손) ↔ 방계 (서얼 등)
- ② 1841~45년간 50건의 再訴 및 유혈분쟁, 촌락레벨의 內濟化 능력 상실
- ③ 大宗(종법질서)의 중재 ← 官의 방관

정구복의 晝齋契 분석

- ① 1849년 설립, 서당(교육)과 재실(제사) 겸용; 기능분화 과정의 과도기적 형태.
- ② 종가 중심의 산송(후유증) 대책(=촌락질서 재건)으로서 설립[重修].
- ③ 계원의 급증(6인→69인, 모두 辛氏), 門中契(族契)의 변환 형태.

村契 및 農業契 분석

- ① 1929년 宗家 주도로 重修. 계원 총 31인 중 신씨가 23명 (74.2%)
契規: 악습개정 및 미풍양속의 진흥, 상호 구휼 및 부조, 탈작·이작 엄금, 契金 운영.
- ② 구래의 영광 鄉約(1797년 重修) 계승 - 촌락 질서 및 호혜적 온정주의관계 재건.
- ③ 農業契(1935년): 계원 총 35인 중 25인 (65.8%)이 동족, “두레”의 근대적 재편.

小 結

- ① 향약 및 동계 (구래의 香徒) → 村契 (지역사회 범위·규모의 재조정)
(위계적·儒敎的 지역 지배질서 → 호혜적 평등의 공동체원리)
- ② 血緣 및 地緣에 기초한 소규모 촌락 단위 결사체, 사회적 안전망의 성격.
- ③ 촌락 레벨의 결사체(=村契, 大同契)는 “공적인 상부구조”를 수립하고 있는가?
(ex. 일본의 *Mura*(村)-Community, 自治村落 등)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의 장기지속과 변화 - 나주 草洞 洞契의 사례 -

문제의식: 전통시대 이래 근대전환기에 걸친 지역사회 내 사회적 결속망의 양상. 즉, 근대전환기 농촌해체의 실상(해체인가? 존속인가?). 농업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지역사회(local society)는 농민을 중심으로 타이트한 공동체적 관계(closed corporate community)를 안정적으로 수립,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대상(立地論): 전남 영산강 중류 광주와 목포 사이의 나주군 서향 다시면 2개 리, 班村. 평야부 稻作지대(=수리조합지구), 미곡단작화(상업적 농업), 高소작지울.

사회구성: 다시면(영동리, 회진리) 除籍簿 분석(1916~1960)

- 1) 영동리(193戶, 1665口), 회진리(116戶, 975口), 戶當 평균 8.5口.
- 2) 가족형태: 핵가족(47%), 직계대가족(22.3%), 복합대가족(16.5%), 기타.
- 3) 除籍유형: 사망(70.5%), 移去(27.5%), 혼인(1.9%) 등.
- 4) 姓貫구성: 영동리(함평 이씨 17.1%, 김해 김씨 8.3%, 고흥 류씨 5.2%, 고성 이씨 5.2%, 흥덕 장씨 5.2% 순), 회진리(나주 임씨 60.3% 압도적).

사회적 관계(결속, 연계)의 두 가지 유형

- 1) 회진리: 나주 임씨를 중심으로 한 族契, 門中契 (혈연관계).
- 2) 영동리(초동): 지역 내 유력 4성씨 연합의 大同契 (의제혈연, 지연관계)

초동(一名 사동) 洞契의 변천

- 1) 1601년 洞契 '창립': 임진왜란(1592) 및 정유재란(1597년)이 주요 계기
- 2) 동년 寶山精舍의 건립, 제사, 교육, 契會의 3가지 기능. 계원수: 250여 명
- 3) 1663년 향약 시행, '鄉約契' 전환, 首領鄉約. 재지사족 중심의 鄉論 주도 향약 4강목과 41개조의 契規 (36개조 현전), 남전 여씨향약의 전통 계승
- 4) 향약 시행 이후, 계원의 감소(150명 전후), 鄉戰 및 分洞,.. 정체.
- 5) 1798년 祠宇 건립, 寶山祠(일명 八賢祠) - 洞契 쇄신의 계기.
- 6) 19세기 이래 '초동 대동계'라는 용례 등장. 1832년 보산정사의 重修. 1870년 보산정사의 大重修를 계기로 契員 확대 (188명), 이후 감소 (99명)
- 7) 한말 일제하 契畵의 감소. 1932년 26斗落 소멸, 한국전쟁기 동계 중단.
- 8) 1960년 동계 중수, 계원 67명. 명목상의 '친목단체'로 변화.

이론적 함의

- 1) 鄉約契: 신분제를 기초로 한 위계제적 지역 지배질서의 확립, 신분제 모순 은폐 운영원리의 변화: 위계제적 지배질서 → 호혜적 공동체 윤리 (::신분제해체)
- 2) 洞契의 규모, 점차 축소(郡縣→面→洞里), "斷續的 조정과정": 특질·한계. 불안정한 성원권(membership) 노정: 결사체와 네트워크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
- 3) 대동계의 공적 기능의 축소 또는 기능분화 (:: 규율권력 침투, 식민지화).

근대전환기 전통 농촌촌락의 재편 - 익산 金馬 두레의 사례 -

시각의 전환: ① 근대전환기 급격한 '근대화'가 전통촌락의 개방화(해체)를 진화론적으로 가정함으로써 동아시아 농촌사회의 역사적 현실과 공동체 이론과의 괴리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② 근대(식민지기)에도 장기 존속하는 전통 촌락의 '유제'(우크라드)를 동아시아의 근대변동의 특질(또는 한계) 가운데 하나로 인식할 필요성 제고.

지역 배경: 전라북도 만경강 北岸 (湖南平野의 북부지대)의 '全州平野.'

고대 馬韓·百濟의 古都, 조선시대 익산군의 邑治, 班村. 1914년 新익산군 확대·재편.

金馬 두레공동체: 금마(고도리) 내 12개 마을(=자연부락)이 두레 결성, 300년의 역사.

- 1) 水稻作지대, 농번기(초여름) 집합적 農작업의 필요성 제고.
하나의 자연부락에 하나의 두레가 作人들의 자치 조직으로서 상설 운영.
- 2) 두레(공동체)의 연합체 결성, 일명 '슴두레' 운영, 지역 공공사업에 대응.
고도리 내 12개 마을은 유교적 '형제서열', 수직적 '軍制'의 유포 존속.
- 3) 面행정구역 개편(1917) 결과, 4개 부락이 연합체에서 이탈, 쇠퇴의 길.
두레 내 수평적 평등원리와 두레 간 수직적 지역질서 공존.

두레연합체의 공연문화

- 1) 개별 두레 내 農樂隊 및 農旗 (마을·두레의 위신과 권위의 상징)
마을 구성원의 자긍심, 단결심 고취, 강제력을 가진 농업공동체 조직.
- 2) 연합체 내 '형제서열'에 따라 유교적 旗歲拜 (三拜禮) 연출.
농민 作人の 양반화 (士의식), 고단한 농업노동의 '놀이문화'화 (노동문화).
- 3) 호남평야(익산, 전주, 김제, 옥구)에서 성행, 농민문화로 정착.
다양한 旗놀이, 기싸움(旗爭), 기세배, 旗接놀이 등. 지연적 연대감의 강화.
- 4) 식민지기 들어서 두레의 쇠퇴, 1960년대 말 6개 부락만이 두레 잔존.
공동 노동관행과 집합적 놀이문화의 본격적 분리, 農旗儀禮 공연문화.

지역사회에 전통성(민족정체성)이 서식하는 역사적 조건

- 1) 유교적, 전통적 분위기(儀禮)가 남아 있는 유서 깊은 班村.
- 2) 식민지기 '근대화' 및 규율권력의 침투로부터 배제된 미곡 단작지대.
- 3) 전통 定期市와 같은 일정 수준의 상품화폐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邑內지역.

재래·전통 조직·단체의 제도화 문제 ← '근대화'(도시화, 산업화) 및 식민지 규율권력의 침투

- ① 기능조직으로 분화, 공적 기능으로 흡수. 關係단체의 濫設.
ex) 농회, 학교조합, 수리조합, 금융조합, 각종 산업조합, 위생조합, 소방조합 등.
- ② 농민간의 자치 조직(契)으로 존속. 족보 및 계의 重修.
ex) 부락계(村契), 족계(門中契), 수리계(堤堰契, 湫契), 松契, 學契, 婚葬契 등.
- ③ 전 2자의 과도기적 유형, 半官半民의 半自治의 地域사회단체.
ex) 충남의 農村振興會 (←洞契, 洞會), 함북의 北關鄉約, 각종 共勵組合 등.

근대 식민지기 한국 촌락의 중층성 - 익산 裡里 및 大場村의 사례 -

관점: 복합사회 속에서의 식민지 지역사회(local society), 신흥 식민도시와 주변 농촌사회.
식민지 규율권력 및 근대적 요소(시장, 도시화(이민), 산업화)가 식민지사회를 관통.

지역개황: 전북 익산군 이리(裡里) 및 그 '近接地(위성타운)' (황등, 오산리, 목천포, 大場村).
大阪(metropole)-군산(city)-이리(town)-'근접지'(semi-town)-전통 농촌사회.
지역사회의 공간적 개념 확대, 인지도(cognitive map), '심상지리'의 변화.

益山の 식민지적 '근대화': 이리(裡里)의 부상과 金馬(舊邑治)의 침체 (서향 12km)

- ① 1899년 군산 개항, 1912년 호남선 개통, 군청소재지의 裡里 移轉 (1911)
- ② 1910년 전후 한국 최초 대규모 수리조합사업 ('개발' 프로젝트). 단, 전통적 水利契의 제도화; 만경강 하류(옥구) 米堤 堤堰契, 만경강 중류(전주) 三禮川防, 複合淤.

신흥 植民都市의 등장

- ① 도시지역의 팽창, 群山(1899) 및 裡里(1911)의 부상. 위계적 지역연관.
- ② 철도개통(1912), 시가지 및 상설시장의 조성, 이민자사회 (日인구비 25% 전후).
- ③ 행정구역 개편(1914~1917), 식민지 農政의 전개 (특히, 산미증식계획).
- ④ '개발' 프로젝트: 학교조합, 번영회, 수리조합, 금융, 산업조합 - 사회적 동원화.
- ⑤ 제국주의 '문명화(즐거움)' 선전 ↔ 회색지대(gray zone) ↔ 격차, 소외

이리의 '근접지', 大場村 - 주변 전통촌락에 '근대화' 작용 여부, 동화주의정책의 일환.

- ① 만경강 북안, 삼례 서향의 稻作지대, 1905년 日人 지주(細川家)의 농장 창업.
- ② '철도연선취락'(日 40戶, 鮮 90戶), 1911년 全益水利組合 창립.
- ③ 1915년 模範村 선정, 今村모범농장, 모범(산업)조합, 모범학교 등 존립.
- ④ 1917년 촌포면 편입, 1921년 면사무소 소재지, '준읍내(semi-town).'
- ⑤ '內鮮人雜居' (:: 동화주의정책), '개발을 통한 同化' 전개, "계층적 분리" 심화.

촌락해체의 이론적 검토

- ①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 대규모 離農 여부, 小農의 농촌퇴적 여부?
∴ 자본주의 이행기 '근대화'가 농촌 촌락의 자동적 해체를 보장하지 않음.
- ② 동아시아 인구밀집지대(상업적농업)에서 小農(little peasant)의 퇴적·잔존.
: 식민지 '개발, 拓植'의 딜레마 초래, '개발의 섬'으로 고립화
- ③ 農地改革(1950)이 촌락 해체를 최후까지 저지 (집성촌의 재건에 기여)

日本 Model Case

- ① 가족 노동력(family farm)에 기초한 자급적 小農 엄존, '3大不變數'.
- ② 明治末期 '自治村落'(autonomous village)으로 轉身(關西) ← 무라(村)공동체.

열린 촌락, 닫힌 공동체의 이미지 - 동아시아 촌락담론 -

과제: 韓國을 중심으로 日本, 中國, Vietnam, Java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근대전환기(=식민지기) 농민의 행위패턴과 촌락의 유형(shut or open case)을 둘러싸고 한국 농민, 나아가 '한국인됨'(Korean-ness)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

촌락의 존재형태, 유형화

- ① 촌락의 대외적 개방도: 토지소유, 통혼권, 성원권, 이농, 농업의 상업화 등.
(南중국, Cochin-china > 北중국, 韓國, Tonkin > Java, 日本)
(일본의 자치촌락, 자바의 데싸[dessa]공동체, 톤킨의 싸[社]공동체 등)
- ② 농민의 행위패턴 (지역공공사업時): 집합적 행위 vs. 개인주의적 행위
(협력적, 이기적, 이타적, 악의적 행위 / 촌락규범·질서)
(Java의 공동노동 관행인 *Gotong Royong (sambatan, krubutan)* 등)
- ③ 열린 촌락 vs. 닫힌 공동체 ← 식민지화의 충격.
(Java의 이념형, Closed Corporate Community).

식민지 농촌에 대한 시장경제화(상품·화폐경제)의 관통

- ① 시장기능의 확대: 상설시장의 부상과 전통 定期市의 활성화
- ② 호혜적 거래(증여) + 국가적 재분배(보조금)의 위축, 전자 영역의 상대적 축소
- ③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여전히 유보적

근대 식민지 촌락의 중층성: 닫힌 공동체의 이미지

- ① 시장경제화에 대한 '지연된 적응,' 부적응.
- ② 식민지 규율권력(조직화, 동원화)에 대한 거부감, '일상정치'(everyday politics).
- ③ 익숙한 것, 전통, 관습, 민속에 회귀: "민족(민속)의 뚫을 수 없는 두터운 벽."

농민사회의 윤리 규범 (촌락질서)

- ① 빈곤의 공유(Shared Poverty), 평등의 압력.
- ② 호혜주의(balanced reciprocity), 집단적 생존윤리 → 촌락질서.
- ③ 농본주의, 파시즘적 조합주의 ← 일본 제국주의 동화주의정책(소화공황 이후).
"근대성(modernity)이 반드시 전통(tradition)을 말살하지 않는다."

남은 과제

- ① 호남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民村의 존재, 그 변동양상?
(두 가지 유형: 유력 성씨를 가진 민촌, 각성바지 민촌)
- ② 집합적 노동관행(노동교환 관습), 공동체적 제재(sanctions)의 실효성 여부?
(혈연, 의제혈연, 지연 등의 네트워크 또는 결사체)
- ③ 근대이행기 중국 촌락에 대한 성격 논쟁?
(W. Skinner의 시장공동체說 vs. P. Huang의 촌락공동체說, 그 이후의 향방)

植民地朝鮮における「開発」を論ずる分析枠組みについて
- 식민지 조선의 개발을 둘러싼 분석 체계에 대해서

마쓰모토 다케노리 교수(도쿄대학교 농업경제학과)

植民地朝鮮における「開発」を論ずる分析枠組みについて

松本武祝

はじめに

今年2015年は、日本の敗戦および朝鮮の解放から70年、日韓基本条約締結から50年目という記念すべき年にあたる。にもかかわらず、日韓関係および日朝関係は最悪の状況にある。日韓関係に関して言えば、日韓基本条約締結に際して日韓両国政府が見解の対立を保留したままで政治的な妥協をしてしまったこと、その後、両国政府はその矛盾を解決するための努力をすることもなく、それぞれの政治的な立場を機械的に繰り返すにとどまってきたこと、が、今日の状況の背景にある。

具体的な論点を、ひとつ挙げる。同条約第2条には、「1910年8月22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と規定されている。この「もはや無効」という文言に関して、日本政府は、“韓国併合時およびそれ以降は法的に有効であったが、韓国が独立したことによって（日韓基本条約締結時である）現在においてはもはや無効”という解釈をおこなっている。これに対して、韓国政府は、“韓国併合条約それ自体が強制によるものであり、併合の時点以来無効である”という立場に立っている。今年7月の世界文化遺産登録をめぐって「強制労働」という用語法が外交問題になったことにも表れているように、この「もはや無効」という文言の解釈をめぐる対立は、今日においてもなお深刻な対立を両国（および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あいだにもたらしめている。

韓国併合条約を有効とする日本政府の立場は、国際法の解釈という法律学の枠組みにとどまらず、より広く、日本人の朝鮮認識に関わる根深い問題に由来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すなわち、日本帝国主義による朝鮮に対する植民地支配を正当なものとして捉える認識で、それである。そしてその認識の前提には、「朝鮮（人）は自力で近代国民国家を作り上げる能力を欠落させていた」という朝鮮（人）に対する蔑視観および「植民地支配を通じてこそ日本が朝鮮（人）を近代化させた」という自己肯定観のふたつの表裏一体の感覚が存在しているといえる。

前者は、朝鮮史研究の文脈においては、いわゆる「朝鮮社会停滞論」に帰結する。これに対しては、解放後の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韓国の歴史研究者が実証を通じて反例を積み重ね、「内在的發展論」と呼ばれる歴史認識を築き上げてきた。それに学びつつ日本人研究者も「内在的發展論」にもとづく朝鮮史研究に取り組んだ。後者の感覚は、いわゆる「植民地近代化論」であり、今日においてもなお、一般市民社会においてもまた研究者の間においても一定の影響力を維持している。植民地朝鮮において「開発」は進展したのは事実である。この報告では、その事実をどのような歴史的観点から捉えることが必要なの

か、という論点を整理することを通じて、「植民地近代化論」に対する批判的な観点を提示したい。

1) 「久保田発言」に関して

「韓国併合の後、日本は植民地にした朝鮮で鉄道・灌漑の施設を整えるなどの開発を行い、土地調査を開始した。」『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2001年）からの引用である（市販本240頁）。この扶桑社版中学校歴史教科書の内容は、その後紆余曲折を経て今日では育鵬社版中学校歴史教科書『新しい日本の歴史』に継承されている。この教科書の採択に反対する地域住民運動の全国的な展開にもかかわらず、依然として根絶できない状況が続いている。

さて、この冒頭の一文に既視感を覚えるのは、私だけではないだろう。「日本としても朝鮮の鉄道や港を造ったり、農地を造成したりし、大蔵省は、当時、多い年で2,000万円も持ち出していた。」1953年第3次日韓会談に際しての日本側首席代表久保田貫一郎（当時、外務省参与）の発言である。日韓国交正常化のための外交交渉が1951年から開始されたが、この発言に代表される“日本は朝鮮に対して恩恵を施した”という主旨の発言が日本側から相次ぎ、その度に交渉は紛糾した。日韓国交正常化は、結局、1965年「日韓基本条約」にまでずれ込んでいる。50年の歳月を越えて発せられたこのふたつの文章から、日本社会における「植民地近代化論」的な認識の根強さを、改めて、確認させられる。

ところで、植民地朝鮮の統治機構であった朝鮮総督府の財政に対しては、植民地期を通じて、日本政府の財政から「補充金」という費目の補助金が支出されていた。前述の久保田発言にある「2,000万円も持ち出していた」というのはこれを指していると思われる。しかし、その大部分は、朝鮮総督府やその附属機関で働く日本人職員の俸給に対する割増支給と各種手当の財源となっていた。久保田発言は、この「持ち出し」が鉄道などインフラの整備と結びついていたかのような印象を与えており、正確ではない。

もちろん、この「補充金」以外にも、日本から朝鮮に対する財政資金・民間資金の流入があり、インフラの整備や農業・工業などの産業開発に投資された。その年ごとの流入額は、産業開発が本格化する1920年代以降に増大し、とくに工業化と軍事化が進展する1930年代以降には急増した。ただし、「持ち出し」論では、朝鮮から日本国内への、預金部資金貯金(郵便貯金)や有価証券買入れ等の形態による資金移動の存在が見過ごされている。その年ごとの流出額もまた、時期を追うごとに増大した。とくにアジア・太平洋戦争期には、戦時下での強制貯蓄を原資として日本国内債券を引き受ける金額が急増したために、流出額は流入額を上回る水準に達した。その他にも、配当金や保険支払などのかたちをとった日本国内への資金流出額も増大した。

1910年「韓国併合条約」は、「完全且永久」な併合を謳っている。当時の日本政府にとっても民間投資家にとっても朝鮮植民地支配は「永久」に続くべきことがらであった。一

且は「持ち出し」として朝鮮に投資された資金は、朝鮮における産業開発を通じて投資者に、利潤や地代、あるいは利子・配当といった所得をもたらした。たとえば、朝鮮における公称資本金5万円以上の会社の利益率と配当率は、1934～36年平均で、それぞれ15.3%、5.2%に上った。また、最大の官業であった朝鮮鉄道の場合、1930年代前半までは赤字基調であったが、それ以降は黒字に転換している。そして、それら所得の一部は、帝国本国に還流した。

2) 植民地朝鮮における「開発」と地域社会

(1) インフラ整備・産業開発の特質

「植民地近代化論」が強調する論点のひとつに、植民地下での「開発」がある。冒頭の久保田発言にあるように、朝鮮総督府は、鉄道・港湾や農地造成などのインフラ整備を実施した。それ自体は事実であるものの、その目的や手法(過程)における植民地に固有な特徴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

鉄道事業の場合、「併合」に先立つ日露戦争時に、軍事物資や兵員を輸送する兵站線を確保するために、日本軍部によって急きょ整備が進められた。釜山港の港湾整備も一連の工事として併せて実施された。日露戦時下の鉄道事業においては、日本軍部は、朝鮮人の土地・家屋が強制収用し、労働力も強制的に徴用した。日本は、朝鮮民衆に対して、「近代」の象徴ともいべき鉄道との「不幸な遭遇」を強いたのである。その後も、朝鮮鉄道には中国大陸侵略のための兵站線としての役割が与えられた。そのために、朝鮮半島を南北に縦貫する幹線鉄道体系が強化されたのに対して、朝鮮内でのローカルな輸送能力は低水準にとどめられた。朝鮮民衆にとって朝鮮鉄道は、日常的な交通手段として有用な装置とはなりえなかったのである。

次に、「農地造成」について。植民地朝鮮においては農地造成(土地改良)事業として大規模な水利事業が実施された。貯水池などの築造によって、地元の農民は伝統的な水利用慣行の変更を余儀なくされた。地元農民はしばしば水利事業に対する反対運動をおこした。しかし、日本人大地主や朝鮮総督府の主導によって事業は強力に推進された。

水利事業に対して朝鮮人が反対した事例をひとつ紹介する。全羅北道益山郡には、百濟時代に由来すると言い伝えられる「腰橋堤」と呼ばれる貯水池があった。朝鮮時代末期には、貯水池内部を埋め立てて耕地として利用する「冒耕」が進行し、その結果、貯水機能が低下していた。この状態に注目した日本人大地主・藤井寛太郎は、この貯水池を改修することによって周辺水田の「灌漑開発」を行なう計画を思いついた。折しも、1908年に韓国政府が「水利組合条例」を発令した。1909年、藤井は水利組合の設置認可を受けて、「

臨益水利組合」の初代組合長となった。この時期に設立された数個の組合を嚆矢として、以後、「灌漑開発」のための組織として、数多くの水利組合が朝鮮各地に設立されていった。

臨益水利組合にとって、貯水池内の冒耕地の買収は困難な作業となった。結局、600町歩の冒耕地のうち4分の1相当分で買収交渉が不調に終わり、1911年に発令された「朝鮮土地収用令」にもとづいて、同年、強制買収が行なわれた。なお、所有権の買収に関しては記録が残されているものの、たとえば小作農民に対する補償がどのようになされたのかに関する記録はまったく残されていない。

この買収作業に関わって、冒耕地を所有する「京城」（ソウル）在住の沈宜甲という人物が、寺内朝鮮総督宛に「申請書」（1911年5月12日付）を提出している（この人物の経歴などは不明である）。沈は其中で、3点にわたって組合の主張を批判している。紙面の都合上、全てを紹介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とくに第3の論点が興味深いので、長文をいわず引用したい。

（組合が事業の正当性を主張する）「第3の理由とするのは公益である。…その貯水によって堤下田地の利益が大きければ堤内の些少の損害は論ずる必要はない。…本人といえども決して公益そのものを非難するものではない。この水利組合事業は果たして純全たる公益であろうか。…公益は公共の利益であり、個人は公共の一分子であるので、まず個人の損害を相当に処分してそののちに公益を計かってもにその利沢に浴せしめるのが真正の公益である。個人の損害は不問に付しておいて公益なののは存在するであろうか。これらの公益は表面において政府の耳目をごまかし社会の同情を集めるのに多少の便宜があるかもしれないが、事実においては他人の人格を無視して所有権を蹂躪するのみであり、さらには社会に害毒を流すのみである」

ところで、水利組合事業が本格化するのは、1920年に「産米増殖計画」が開始されて以降のことである。この計画は、1918年米騒動で顕在化した日本国内のコメ供給力不足を補うために開始された事業であった。ところが30年代には、農業不況にともなって農産物過剰問題が深刻化した。朝鮮から日本国内へのコメ移出量を抑えるために、この計画は中止されている。農地造成事業の目的は、朝鮮における食糧の安定供給ではなく、なにより、日本国内でのコメ需給バランスの確保にあったのである。

最後に、水力発電用ダムの建設について。1920年代後半以降、朝鮮北部の国境地帯では巨大ダムによる電源開発が進められ、それを基盤に重化学工業地帯が形成された。そこで生産された化学肥料(硫酸)は、朝鮮だけではなく帝国内の農村地域に広く供給された。また、その副産物が火薬に転用可能であることから、この地域の工業開発は、日本にとっては軍事戦略上も重要な位置づけがなされた。巨大ダム建設過程においては、数多くの住民が転居を余儀なくされた。朝鮮総督府は、警察を動員して住民の反発を未然に取り締りつつ

、同じく警察を介して土地・家屋の買収を行ったりもした。

代表的な事例をひとつ紹介する。1937年、朝鮮と「満洲」の境界を流れる大河川・鴨緑江に水力発電のための水豊ダム建設が開始された。44年、当時としては世界有数の巨大ダムが完成した。この巨大ダム建設によって、約1万5千戸の家屋が水没することとなった（居住者7万人）。水没予定地住民の様子を、ある官庁文書は以下のように伝えている。「祖先伝来の地を去るのはまことに忍び難いところであり、一族挙げて崇敬してきた累代祖先の墳墓を移し、これらの土地を永遠に水中に没することに対する痛惜の思いには限度がないとあって、悲痛な鬱憤を洩している……」。

なお、この水豊ダムをはじめとする植民地朝鮮での巨大ダム事業において中心的な役割を果たした技術者・久保田豊は、戦後、日本工営という会社を設立する。日本工営は東南アジア各国でダム開発事業を手掛けてゆくが、それらの多くが戦後賠償資金およびODAや海外経済協力基金による事業であった。なお、日本工営が直接にかかわった事業ではないものの、日本政府のODAによるインドネシア・スマトラSumatera島のコタパンジャンKoto Panjang・ダム建設にともなって、1万7千の住民が移転対象となった。2002年には、「伝統的な集落を解体されて古い文化が失われ、精神的苦痛を受けた」として、住民3,980人が日本政府などを相手に提訴を行なっている（引用は「朝日新聞」2002年9月2日付夕刊より）。60数年を隔てたふたつのダム事業の間には、単なる類似性にとどまらない歴史的な連関が存在するのである。この訴訟では、一審・二審ともに住民側請求は全面棄却され、現在最高裁に上告中である。

以上のように、植民地下でのインフラ整備や産業開発は、日本が朝鮮に押し付けた軍事的・経済的な役割に応えるかたちで韓国統監府朝鮮総督府によって推進されたものであった。しかも、朝鮮総督府は、「民主的」な手続きを踏むことなく、強権的に大規模な各種事業を実施していったのである。植民地下の朝鮮では、朝鮮人の政治的権利が否定されていた。そのことが、強権的な事業実施を可能にしていたといえる。インフラ整備や産業開発が外見上「順調」に実施されていた裏面には、意思に反して労働力を徴用され、また生産と生活の基盤を物理的に奪われた数多くの朝鮮人の存在があったのである。多くの朝鮮民衆は、朝鮮総督府による強権的な開発に対して抵抗を試みた。しかし、朝鮮総督府は、それらの抵抗活動を抑圧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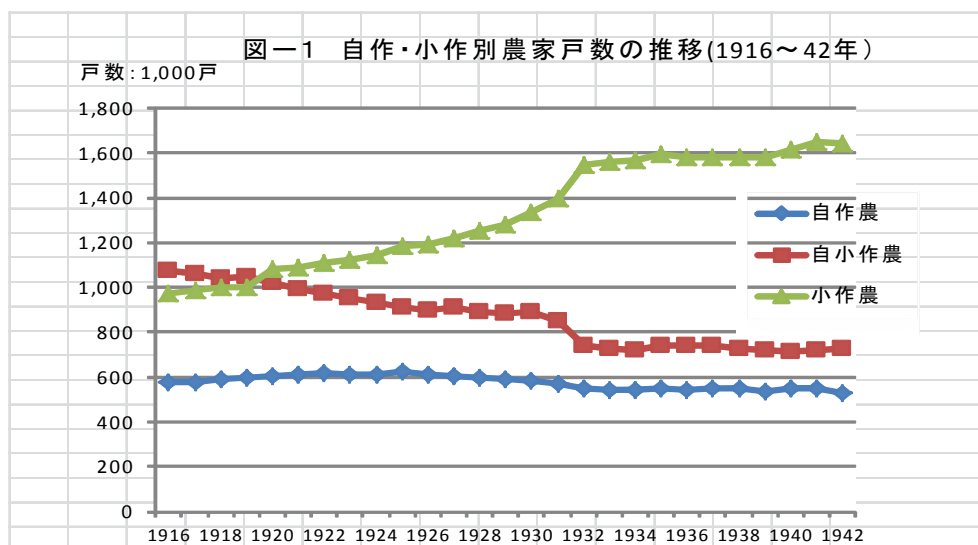
産業開発の結末

「併合」時点での朝鮮は、農業中心の社会であった。その後、工業生産額が急増し、1940年には農業生産額とほぼ同額となっている。財政・民間部門による投資は農業生産の伸長

をもたらしたが、さらにそれらは、農業生産を大幅に上回る速度で工業生産の伸長を実現していった。

ただし、こうした生産力の上昇や産業構造の「高度化」にもかかわらず、朝鮮の就業構造にはそれほど大きな変化は起こらなかった。朝鮮人有業者数に占める農業従業者比率は、1930年の81%が、40年に74%へと減少したにとどまる。朝鮮に立地した重化学工業などの大工場の場合、その多くは、当時の先端技術にもとづくものであった。そのために、機械や装置への設備投資が巨額に及んだのとは対照的に、労働力をそれほど必要としなかった。その結果、急速な工業部門の伸展にもかかわらず、就業労働力の需要は限定的であった。かつ技術管理・生産管理は朝鮮在住日本人のホワイトカラーや技術者によって担われていたために、朝鮮人の就業機会はさらに制限されていた。結果として、大多数の朝鮮人は農業部門にとどまらざるをえなかった。

ところで、「産米増殖計画」の過程でコメが大量に日本に移出されるようになり、その価格は帝国内での需給状況に強く規定されるようになった。コメに次いで重要な商品作物であった棉花や繭に関しては、紡績資本・製糸資本（日本からの進出資本および一部朝鮮人民族資本）が地域ごとに独占的に原料（棉花・繭）を買い取る制度がつけられた。そのためにそれら商品作物の価格は、農民に不利に決定されていた。その一方で農民は、化学肥料など農業生産に必要な資材の購入あるいは水利事業費（事業借入金の償還）など、現金支出負担の増大を強いられた。くわえて、かつて朝鮮農村には、綿織物などの在来産業部門が発達しているが、日本国内からの工業製品の流入、朝鮮での機械制繊維工業の立地などによって、農民の自給的生産領域を残してそれら在来産業は衰退してしまった。交通網の整備が、こうした傾向を促進した。こうして、朝鮮農民にとっては、インフラ整備・産業開発が農業所得水準の停滞をもたらしたばかりでなく、兼業・副業収入源までも奪う契機となった。



資料：朝鮮総督府『朝鮮総督府統計年表』各年版より作成。

注1) 1920~32年の自作農には耕作地主(地主(乙))を含む。

注2) 1919年以前の数値は不正確なため省略した。

図-1に朝鮮における農家戸数の推移を示した。自作農の場合、1920年代前半までは微増、それ以降微減に転じている。自小作農は一貫して減少、小作農はぎゃくに一貫して減少の動きを示している。上記のような農家所得（農業所得+農外所得）の変化にともなうて負債を累積させる農家が増大した。しかも、当時朝鮮農村には近代的な金融機関が発達しておらず、これらの負債の大部分が高利貸によるものであった。結果的にそれらの農家は、所有農地を喪失せざるを得なかった。こうして、数多くの自作農・自小作農家（とくに後者）が土地を失うこととなった。その裏面では、日本人・朝鮮人地主が農地を集積した。非農業部門において労働力を吸収する力が弱かったために、これら困窮した農民は、土地を失った後も小作農として農村に滞留した。小作地借り入れを望む農家が増えたために、地主へ支払う小作料の水準は高止まりしたままであった。高率小作料もまた、農民の困窮化を促す要因となった。

貧窮した農民は、相対的に高価なコメの商品化量を増やし、代わりに「満洲」から輸入された粟などの安価な雑穀類を購入して消費することで、糊口をしのいだ。それでも1930年代の農業不況期には、農村に留まることができずに、数多くの零細農民が就業機会を求めて日本や「満洲」に渡り、都市部最下層の労働力市場への参入を試みた。一部の農民は、森林地帯に分け入って焼畑農業を行った（火田民）。あるいは、「京城」（ソウル）市内に流入して都市の雑業者となった人々もいた。京城市街の周辺部には粗末な家屋を立てて居住し日雇いなど単純労働に従事する都市貧民（土幕民）の集落が形成された。

まとめ

植民地期を通じて、朝鮮においては、鉄道網などの交通機関が整備され、大規模な水利事業や水力電源開発が実施された。そして、化学肥料工業などの重化学工業部門を中心に工業化が急速に進展した。しかし、それは、日本の軍事的要請にもとづくものであり、あるいは朝鮮に賦存する資源を開発して日本に安価で安定的に食料や原材料を供給することをめざすものであった。これらインフラ整備や産業開発に際しては、強権的な手法が採用され、朝鮮人利害関係者たちの意向はしばしば無視された。そして、事業の過程では、生産と生活の基盤を失って移住を強いられる朝鮮人が数多く発生した。

こうしたインフラ整備・産業開発は、朝鮮経済に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た。農村においては、農業所得水準が停滞し、兼業・副業就業機会が減少した。その結果、朝鮮農民の所

得水準は停滞し、農地所有権を失う農家が続出した。その裏面で、日本人・朝鮮人地主への農地所有集中が進んだ。植民地下での朝鮮は、工業化の急速な伸展にもかかわらず、非農業部門における労働力市場の展開は限定的であった。農地を喪失した農民は、小作農として農村に滞留せざるを得なかった。それが農地の小作料水準を高止まりさせて、農民の所得水準を停滞させるもう一つの要因となった。農村に滞留することさえ困難となった朝鮮農民は、「満洲」や日本に移住して、土木作業など都市最下層の労働力市場への参入を図った。また、京城など都市の雑業者となる者も多数現れた。

このように、日本からの資金流入とそれを原資とするインフラ整備・産業開発は、朝鮮人民衆の生活水準向上に結び付くことはなかった。そして、朝鮮人民衆の生活水準＝労働力再生産費用の低位性は、ぎゃくに朝鮮に投資をおこなった資本家・地主に巨額の地代と利潤をもたらすこととなった。これらの地代・利潤は、一部は朝鮮内に再投資され、残りの一部は日本に還流したのである。

水田直昌監修『総督府時代の財政』友邦シリーズ第19号、友邦協会、1974年、160頁を参照。

以上の変化は、金洛年『日本帝国主義下の朝鮮経済』東京大学出版会、2002年、第5章を参照。

山本有造「日本の植民地投資—朝鮮・台湾に関する統計的観察—」『社会経済史学』第38巻第5号、1973年、94頁。

平井廣一「日本植民地下における朝鮮鉄道財政の展開過程」『経済学研究』（北海道大学）第34巻第4号、1985年、17頁。

高成鳳『植民地鉄道と民衆生活』法政大学出版局、1999年、12頁を参照。

鄭在貞（三橋広夫訳）『帝国日本の植民地支配と韓国鉄道：1892～1945』明石書店、2008年、第3章。

松本武祝『植民地期朝鮮の水利組合事業』未来社、1991年を参照。

全北農地改良組合『全北農組70年史』1978年、119頁、参照。1940年に、臨益水利組合など近隣4組合が合併して全北水利組合が成立している。この農地改良組合はその後身である。

。

農業基盤公社全北支部（前・全北農地改良組合）所蔵。なお、この「申請書」は「朝鮮総督府」の便箋に書かれており、原文を書き写したものと思われる。原文が朝鮮語、漢語、日本語のいずれであったかは確認できない。引用文は現代文に書き直した。

広瀬貞三「水豊発電所建設による水没地問題—朝鮮側を中心に—」『朝鮮学報』第139号、1991年を参照。

平安北道委員「土地買収対策」『鴨緑江開発委員会関係A』（元朝鮮総督府調査官安達遂氏所蔵）。広瀬貞三「水豊発電所建設による水没地問題—朝鮮側を中心に—」『朝鮮学報』第139輯、1991年4月、より再引用。水豊ダムに関する記述は、この論文に依拠した。
小林英夫『日本企業のアジア展開』日本経済評論社、2000年、71～72頁、参照

식민지 조선에서 ‘개발’을 논하는 분석구조에 대해

마쓰모토 다케노리

시작하며

2015년은 일본의 패전, 한국의 해방(광복) 70년, 일한기본조약체결로부터 50년이라는 기념해야 할 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관계 및 일조(북한)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일한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일한기본조약체결에 맞춰 일한양국 정부가 견해의 대립을 보류한 채 정치적인 타협을 해 버린 점, 이후 양국정부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대립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만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 배경이다.

구체적인 논점을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일한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이전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제는 무효인 것이 확인되었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는 무효’라는 문구를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한국병합 당시 및 이후는 법적으로 유효했지만 한국이 독립함으로써 (일한기본조약체결 당시)현재는 이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정부는 “한국병합조약 그 자체는 강제에 의한 것으로 병합의 시점 이후 무효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올 7월의 세계문화유산등록을 둘러싸고 ‘강제노동’이라는 용어가 대외적으로 문제가 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제는 무효’라는 문구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은 현재도 여전히 심각한 대립을 한일양국(및 북한)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병합조약을 유효로 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국제법의 해석이라는 법률학의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폭넓게 일본인의 조선인식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즉,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제에는 ‘조선(인)은 자력으로 근대국민국가를 만들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조선(인)에 대한 멸시관 및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비로소 일본이 조선(인)을 근대화시켰다’는 자기 긍정관 사이의 표리일체의 감각이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전자는 조선사 연구의 문맥에서 말하자면 ‘조선사회정체론’으로 귀결한다. 이에 대해 해방 후의 북한과 한국의 역사연구자가 실증을 통해 반례(反例)를 거듭하며 ‘내재적 발전론’으로 일컫는 역사인식을 만들어왔다. 이를 인식하며 일본인 연구자도 ‘내재적 발전론’에 근거해 조선사 연구에 임했다. 후자의 감각은 ‘식민지근대화론’이며 현재에도 여전히 일반시민사회는 물론 연구자 사이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개발(開發)’이 진전(進展)된 것은 사실이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어떠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보다(久保田) 발언’에 관해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중 하나인 『새로운 역사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1, 시판본 240쪽)은 ‘한국병합 후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 철도, 관개(灌溉)시설 등을 정비하는 개발과 함께 토지조사를 개시했다’도 기술하고 있다. 이후 후쇼사판(扶桑社)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이쿠호사판(育鵬社版) 중학교 역사교과서 『새로운 일본의 역사(新しい日本の歴史)』로 계승되었다. 이 교과서의 채택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운동의

전국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 앞의 한 문장을 어딘가에서 본 듯한 착각(既視感)을 느낀 것은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일본도 조선의 철도와 항만을 만들고 농지를 조성했으며 대장성은 당시 많은 해에는 2000만 엔이나 부담했다.’ 1953년 제3차 일한회담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였던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 1902~1977, 당시 외무성 참여)의 발언이다. 일한국교 정상화를 위한 외교 교섭이 1951년부터 개시됐지만 이 발언으로 대표되는 ‘일본은 조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주지의 발언이 일본 측에서 연이어지며 그 때마다 교섭은 말썽이 많았다. 일한국교 정상화는 결국 1965년 ‘일한기본조약’에까지 늦어지게 되었다. 50년의 세월을 흘러 현재까지 전해져오는 이 두 문장은 일본사회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적인 뿌리 깊은 인식을 새롭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의 통치기구였던 조선총독부의 재정에는 당시 일본정부의 재정에서 ‘보충금(補充金)’이라는 명목의 보조금이 있었다. 앞에서 밝힌 구보타의 발언에 ‘2000만 엔이나 지원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된다.¹⁾

하지만 ‘보충금’ 대부분은 조선총독부나 부속기관에서 일한 일본인 직원의 봉급에서 증액지급과 각종수당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구보타 발언에서 ‘지원했다’가 철도 등 인프라 정비와 연결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물론, 이 ‘보충금’이외에도 일본에서 조선에 대한 재원자금, 민간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인프라 정비와 농업, 공업 등의 산업개발에 투자되었다. 해를 거듭하며 유입액(流入額)은 산업개발이 본격화되는 1920년대 이후에 증대했으며 특히 공업화와 군사화가 진행했던 1930년대 이후에 급증했다. 단, ‘지원했다’론에서는 조선에서 일본 국내로 예금부 자금저금(우편 저금)과 유가증권매입 형태의 자금이동의 존재를 간과(看過)하고 있다. 한 해, 한 해, 유출액도 시기를 좇아 증대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강제저축을 종자돈으로 일본국내 채권을 인수할 금액이 급증했기 때문에 유출액은 유입액을 상회하는 수준에 달했다. 이외에도 배당금과 보험지불 등의 형태로 일본 국내로 자금 유출액이 증대했다.²⁾

1910년 ‘한국병합조약’은 ‘완전 또는 영구’한 병합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당시 일본정부에게도 민간투자자에게도 식민지 조선의 지배는 ‘영구’히 이어져야 할 일이었다. 한때 조선에 ‘지원했다’는 자금은 조선의 산업개발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윤과 지대, 또한 이자, 배당이라는 소득을 안겨다주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조선에서 회사의 기본자금으로 5만 엔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이익률과 배당률은 1934~36년 평균으로 각각 15.3%, 5.2%로 올랐다.³⁾ 또한 최대의 국책사업이었던 조선철도의 경우, 1930년대 전반까지는 적자기조였지만, 이후 흑자로 전환하고 있다.⁴⁾ 그리고 이들 소득의 일부는 일본 제국 본국으로 들어갔다.

1) 미즈타 나옴사(水田直昌)監修『총독부 시대의 재정(總督府時代の財政)』友邦シリーズ 제19호, 우방협회(友邦協會), 1974년, 160쪽 참조.

2) 이상의 변화는 김낙년(金洛年)『일본제국주의의 조선경제(日本帝國主義下の朝鮮經濟)』東京大学出版會, 2002년, 제5장 참조.

3) 야마모토 유조(山本有造)「일본의 식민지 투자-조선·대만에 관한 통계적관찰-(日本の植民地投資-朝鮮・台湾に関する統計的觀察-)」『社会經濟史学』제38권 제5호, 1973년, 94쪽.

4) 히라이 히로카즈(平井廣一)「일본식민지하의 조선철도재정의 전개과정(日本植民地下における朝鮮鐵道財政の展開過程)」『經濟学研究』(北海道大学) 제34권 제4호, 1985년, 17쪽.

식민지 조선의 '개발'과 지역사회-인프라 정비, 산업개발의 특징

'식민지 근대화론'이 강조하는 논점 중 하나가 식민지하에서의 '개발'이다. 앞의 구보타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총독부는 철도, 항만, 농지조성 등의 인프라 정비를 실시했다. 그 자체는 사실이지만 목적과 수법(과정)에 식민지의 고유한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철도사업의 경우, '병합'에 앞서 러일전쟁 시기에 군사물자와 병력을 운송할 병참선(兵站線) 확보를 위해 일본군부에 의해 신속히 정비가 이루어졌다. 부산항의 항만정비도 일련의 공사와 함께 실시되었다. 일본 군부는 러일전쟁 상황에서 철도사업을 위해 조선인의 토지, 가옥의 강제수용, 노동력도 강제적으로 징용되었다. 일본은 조선 민중에게 '근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철도와 '불우한 만남'을 강요한 것이다.⁵⁾ 이후에도 조선철도는 중국대륙침략을 위한 병참선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 때문에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간선철도체계가 강화되었음에 비해 조선내의 지역 간의 운송능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조선 민중에게 철도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유용한 장치는 되지 못했다.⁶⁾

다음은 '농지조성'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농지조성(토지개량)사업의 하나로 대규모 수리사업이 실시되었다. 저수지 등의 축조로 인해 지역 농민은 이제까지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수리관행을 새롭게 바꿔야 했다. 지역 농민은 때때로 수리사업에 반대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일본인 대지주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사업은 강력히 추진되었다.⁷⁾

조선인이 수리사업에 반대한 예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전라북도 익산군(황등면)에는 백제시대에 유래했다고 전해지는 '요교제(腰橋堤)'라 불리는 저수지가 있었다. 조선 말기에는 저수지 내부를 매꿔 경지로 이용하는 '모경(冒耕: 주인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함부로 경작하는 것)'이 이루어져 그 결과 저수기능이 저하되었다. 이를 주목한 일본인 대지주,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는 저수지를 개수함으로써 주변 수전의 '관개개발(灌溉開發)' 계획을 생각하게 된다. 때마침 1908년에 한국정부는 '수리조합조례'를 발령한다. 1909년, 후지이는 수리조합의 설치인가를 받고 '임옥수리조합(臨沃水利組合)'의 초대 조합장이 되었다. 임옥수리조합은 같은 시기에 설립된 몇몇 조합의 효시였으며 이후 '관개개발'을 목적으로 수많은 수리조합이 조선 각지에 설립되었다.

임옥수리조합에게 저수지 안의 모경지 매수(買收)는 곤란한 작업이었다. 결국 600정보의 모경지 중 4분의 1만을 매수했을 뿐 1911년 발령된 '조선토지수용령'에 의거해 같은 해 강제매수가 이루어졌다.⁸⁾ 또한 소유권의 매수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소작농민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매수 작업에 관련해 모경지(冒耕地)를 소유한 '경성'에 사는 심의갑(沈宜甲)이라는 인물이 데라우치 총독 앞으로 '신청서'(1911년 5월 12일)를 제출한다. (이 인물의 경력은 명확하지 않다) 심의갑은 신청서에서 조합의 주장에 세 가지 점을 들며 비판하고 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특히 세 번째 논점이 흥미롭기에 장문임에도 불구하고 인용하고자 한다.

5) 고성봉(高成鳳)『식민지 철도와 민중생활(植民地鐵道と民衆生活)』法政大学出版社, 1999년, 12쪽 참조.
6) 정재정 (미쓰하시 히로오 옮김)『제국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한국철도: 1892~1945(帝國日本の植民地支配と韓国鐵道: 1892~1945)』明石書店, 2008년, 제3장.
7) 마쓰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식민지 조선의 수리조합사업(植民地期朝鮮の水利組合事業)』未來社, 1991년 참조.
8) 전북농지개량조합『전북농조 70년사』1978년, 119쪽, 참조. 임옥수리조합 등 근접 네 조합이 병합해 전북수리조합이 성립했다. 이 농지개량조합은 그 후신이다.

(조합이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공익이다… 저수로 제방 아래 논과 밭의 이익이 커진다면 제방내의 일부 피해는 논할 필요가 없다…본인 또한 결코 공익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수리조합사업은 결코 순수한 공익인가…공익은 공공의 이익이며 개인은 공공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선 개인의 손해를 일정액으로 처리한 후 공익을 도모하며 함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공익이다. 개인의 손해는 불문에 붙이고 공익이 존재할까. 이러한 공익은 표면에 정부의 이목을 속이고 사회의 동정을 모음에 다소 편리할지 모르지만 실은 타인의 인격을 무시해 소유권을 유린할 뿐이며, 게다가 사회에 해독(害毒)을 만연시킬 뿐이다.⁹⁾

그런데 수리조합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은 1920년 ‘산미증식계획’이 개시된 이후의 일이다. 이 계획은 1918년 쌀 소동으로 두드러진 일본국내의 쌀 공급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개시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1930년대에는 농업불황으로 농산물 과잉문제가 심각해졌다. 조선에서 일본 국내로 쌀 이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이 계획은 중지되었다. 농지조성사업의 목적은 조선에서의 식량의 안정공급이 아닌, 일본국내에서의 쌀 수급의 밸런스의 확보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력발전용 댐의 건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920년대 후반이후, 조선 북부의 국경지대에서는 거대댐에 의한 전력개발이 진행되어 이를 기반으로 중화학공업시대가 형성되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화학비료인 황산암모늄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내의 농촌지역에 널리 공급되었다. 황산암모늄의 부산물이 화약으로 전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공업개발은 일본에게는 군사전략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거대댐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이주해야 했다. 조선총독부는 경찰을 동원해 주민의 반대를 미연에 단속했으며 경찰을 통해 토지가옥의 매수를 하기도 했다.¹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1937년 수력발전을 위해 조선과 ‘만주(滿洲)’의 국경을 흐르는 대하천인 압록강에 수풍댐 건설이 시작되었다. 7년 후인 1944년 당시,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한 거대댐인 수풍댐이 완성되었다. 수풍댐의 건설로 인해 약 1만5천 가구가 수몰되었다.(거주자 7만 명) 수몰예정지 주민의 모습을 관청문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조상대대로 지켜온 땅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참기 힘든 일이며 일가족 모두가 모셔왔던 선조 대대의 분묘를 이장하고 이들 토지가 영원히 물속으로 잠겨버리는 것에 대한 애석함(痛惜)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비통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¹¹⁾

수풍댐을 시작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거대댐 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술자 구보타 유타가(久保田豊)는 전후(戰後), 일본공영(日本公營)이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일본공영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댐 개발사업을 펼쳐나가지만 이들 대다수가 전후 배상자금 및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사업이었다.¹²⁾ 일본공영이 직접 관계한 사업은 아니지만 일본정부의 ODA에 의한 인도네시아·수마트라

9) 농업기반공사 전북지부(전 전북농지개발조합)소장, 이 ‘신청서’는 ‘조선총독부’의 편지지에 쓰여 있으며 원문을 옮겨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원문은 조선어, 한문, 일본어 중 어떤 언어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인용문은 현대어로 옮겼다.

10) 히로세 데이조(広瀬貞三)「수풍발전소 건설에 의한 수몰지문제-조선측을 중심으로(水豊発電所建設による水没地問題-朝鮮側を中心に-)」『朝鮮學報』제139호, 1991년 참조.

11) 평안북도위원「토지매수대책(土地買収対策)」『압록강 개발위원회 관계 A(鴨綠江開發委員會關係A)』(전 조선총독부 조사관 安達遂 소장). 히로세(広瀬貞三)「수풍발전소 건설에 의한 수몰지문제-조선측을 중심으로-(水豊発電所建設による水没地問題-朝鮮側を中心に-)」『朝鮮學報』第139輯, 1991년 4월 인용, 수풍댐에 관한 기술은 이 논문에 의거했다.

12)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일본기업의 아시아 전개(日本企業のアジア展開)』日本經濟評論社, 2000

섬의 코토 판장댐(Koto Panjang) 건설로 1만 7천명의 주민이 이주대상이 되었다. 2002년에는 '전통적인 집락이 해체되어 옛 문화가 사라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주민 3,980명이 일본정부 등을 상대로 제소를 하고 있다.(인용은 아사히신문 2002년 9월 2일 석간) 60여년의 간격을 둔 두 댐건설 사업은 단순한 유사성에 그치지 않는 역사적인 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제1심·제2심 모두 주민 측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으며 현재 최고재판소에 상고중이다.

이처럼 식민지 지배에서 인프라 정비나 산업개발은 일본이 조선에 강압한 군사적·경제적인 역할에 따라 한국 통감부·조선총독부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 게다가 조선총독부는 '민주적'인 수속을 밟지 않고 강압적으로 대규모 각종 사업을 실시했던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조선인의 정치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강압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프라 정비나 산업개발이 외견상 '순조롭게' 실시되었다는 이면(裏面)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노동력이 징용, 생산과 생활의 기반을 물리적으로 빼앗겼던 수많은 조선인의 존재가 있었다. 수많은 조선 민중은 조선총독부의 강압적인 개발에 저항을 시도했지만 조선총독부는 이들 저항 활동을 억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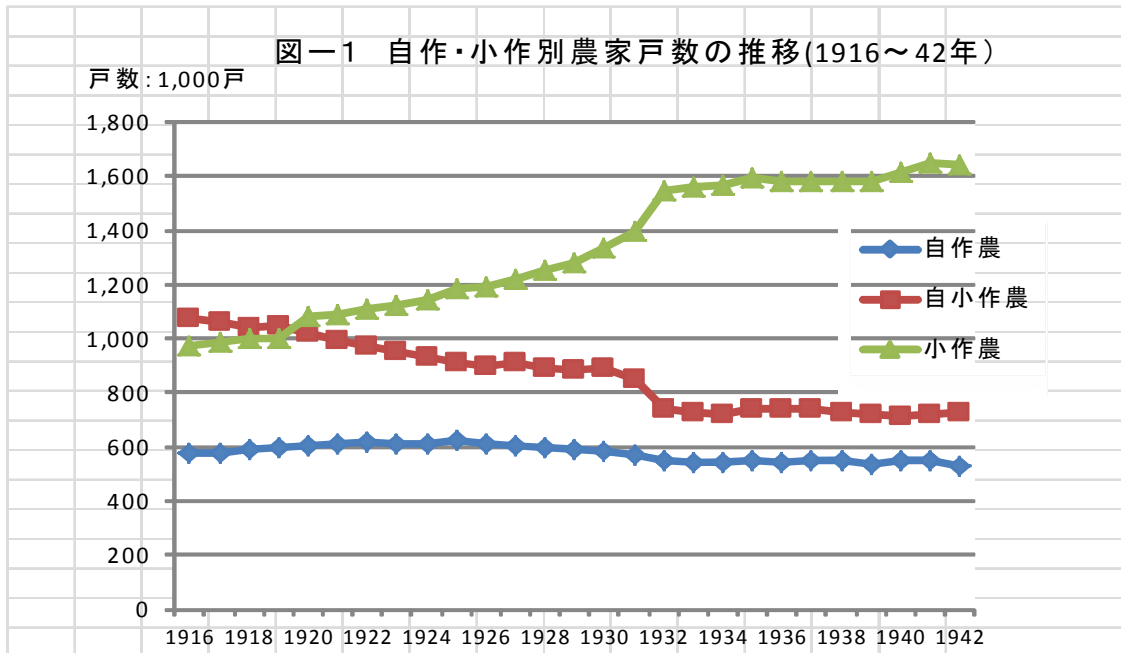
산업개발의 결말

'병합'시점에서 조선은 농업중심의 사회였다. 이후 공업생산액이 급증해 1940년에는 농업생산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었다. 재정·민간부문의 투자로 인해 농업생산의 신장(伸張)을 가져왔지만 이들 투자는 농업생산을 대폭으로 상회하는 속도로 공업생산의 신장을 실현시켰다.

단, 이러한 생산력 상승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취업구조에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다. 조선인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농업종사자 비율은 1930년의 81%, 40년에는 74%로 감소한다. 조선에 설립된 중화학공업 등의 대공장의 경우, 대부분은 당시 첨단기술에 기반했다. 때문에 기계나 장치에 대한 설비투자가 거액이었던데 비해 노동력은 그 정도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급속한 공업부문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취업노동력의 수요는 한정적이었다. 기술관리·생산관리는 조선체제 일본인 화이트칼라나 기술자가 담당했기 때문에 조선인의 취업 기회는 더욱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조선인은 농업부문에 머물러야 했다.

그런데 '산미증식계획'의 과정에서 쌀이 대량으로 일본에 이입되며 가격은 일본 제국내의 수급상황에 엄격하게 규정되게 되었다. 쌀에 이어 중요한 상품작물이었던 면화나 누에고치는 방적자본·제사자본(일본으로부터의 진출자본 및 일부 조선인 민족자본)이 지역마다 독점적으로 원료(면화·누에고치)를 사 들이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이들 상품작물의 가격은 농민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다. 한편 농민은 화학비료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 구입 또는 수리사업비(사업차입금의 상환) 등 현금지출부담의 증대를 강요당하게 되었다. 덧붙여 이전의 조선 농촌에는 면직물 등 재래산업부문이 발달했지만 일본 국내에서 공업제품의 유입, 조선에서의 기계제 섬유공업의 설립 등으로 농민의 자급적 생산영역을 뺀 재래 산업은 쇠퇴해 버렸다. 교통망의 정비가 이러한 경향을 촉진했다. 조선농민에게는 인프라 정비·산업개발이 농업소득수준의 정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겸업·부업수입원까지를 빼앗는 계기가 되었다.

년, 71~72쪽 참조



자료: 조선총독부『조선총독부 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表)』각년도판 인용.

주1) 1920~32년의 자작농에는 경작지주(지주 을)을 포함

주2) 1919년 이전의 수치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생략했다.

그림1은 조선의 농가 호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작농의 경우 1920년대 전반까지는 미미하게 증가하지만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자소작농은 일관해 감소, 소작농은 반대로 일관해 감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농가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의 변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농가가 증가했다. 게다가 당시 조선의 농촌에는 근대적인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않아 농민들의 부채(負債) 대부분은 고리대(高利貸)에 의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농가는 소유농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자작농·자소작 농가(특히 후자)가 토지를 잃게 되었다. 그 이면(裏面)에서 일본인·조선인 지주가 농지를 사들였다. 비농업부분에서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들 궁핍한 농민은 토지를 잃은 후에도 소작농으로 농촌에 체류했다. 소작지 차입(借入)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주에게 내는 소작료의 수준은 높은 수준에 머물 채였다. 고소작료 또한 농민의 궁핍화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빈궁(貧窮)한 농민은 상대적으로 비싼 쌀의 상품화양을 늘리기 위해, 쌀 대신 ‘만주(滿洲)’에서 수입된 조(粟) 등 값싼 잡곡류를 구입해 소비함으로써 겨우 끼니를 이어갔다. 그러나 1930년대의 농촌 불황기에는 더 이상 농촌에 머물 수 없어 수많은 영세농민이 취업기회를 찾아 일본이나 ‘만주’로 건너가 도시부 최하층의 노동력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다. 일부의 농민은 삼림지대에 흩어져 화전(火田)을 일구거나 ‘경성(서울)’으로 나가 도시의 잡업자(雜業者)가 되는 이들도 있었다. 경성시 주변부에는 변변찮은 가옥을 세워 그곳에 거주하며 하루하루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도시빈민인 토막민 집락이 형성되었다.

마무리

식민지기를 통해 조선에서 철도망 등의 교통기관이 정비되어 대규모 수리사업이나 수력개발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화학비료공업 등의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군사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식료나 원자재 및 경제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천연자원을 개발해 일본에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이들 인프라 정비나 산업개발은 강압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조선인 이해관계자들의 의향은 때때로 무시되었다. 그리고 사업의 과정에서 생산과 생활의 기반을 빼앗기고 이주를 강요당한 조선인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프라 정비·산업개발은 조선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에서는 농업소득 수준이 정체되었으며 겸업과 부업 등 취업기회가 감소했다. 그 결과 조선 농민의 소득 수준은 정체, 농지소유권을 잃은 농가가 속출했다. 그 이면(裏面)에는 일본인·조선인 지주가 있었으며 농지는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식민지 조선은 공업화의 급속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비농업부문에서 노동력 시장의 전개는 한정적이었다. 농지를 상실한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해 농촌에 머물러야 했다. 이는 소작료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농민의 소득수준을 정체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농촌에 머무르는 것조차 곤란해진 조선 농민은 '만주(滿洲)'나 일본으로 이주해 토목사업 등 도시 최하층의 노동력 시장으로 들어가기를 꿈꿨다. 또 경성 등의 도시의 잡업자(雜業者)가 되는 이들도 다수 등장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자금 유입과 이를 종잣돈으로 한 인프라 정비·산업개발은 결코 조선인 민중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다. 또한 조선인 민중의 생활수준=노동력 재생산비용의 저위성(低位性)은 오히려 조선에 투자한 자본가·지주에게 거액의 지대(地代)와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지대와 이윤의 일부는 조선에서 재투자되었으며 남은 일부는 일본으로 흘러들어갔다.

MEMO

MEMO